

‘史草’ 실종’ 확인… 진실규명 검찰로 가나

〈시초〉

여야 “대화록 없다” 결론

여 “친노 책임” 검찰수사 불가피

민주 ‘기록관 게이트’ 특검 고려

여야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원회들은 22일 최종 검색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는 데 실패했다.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민주당 박남춘·전혜철 의원 등 열람위원 4명은 이날 오전 성남 국가기록원을 나흘째 방문, 최종 검색작업을 실시했으나 끝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양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에 따라 열람 위원들은 오후 6시 30분에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참석,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다’고 공식 보고했다.

새누리당 열람위원 단장 겸인 황진하 의원은 보고에서 “문건의 수, 문건 용량, 검색 확인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 검색했으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열람위원 단장 겸인 우윤근 의원은 “기록물 인수관리시스템의 심각한 부실이 확인됐고, 그



여야 대통령 기록물 열람위원회들이 22일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 지점 기록물 열람실을 떠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명철(왼쪽부터),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 박남춘, 전혜철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결과 회답록이 (노무현 정부로부터)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NLL(북방한계선) 발언 정국은 대화록 실종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새누리당은 벌써 참여정부를 정조준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체계상 국

을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로부터 아예 이관되지 않았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기록관 게이트’로 규정, 역공에 나섰다. 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願) 사본의 무단 봉

인해제 및 불법 접속 논란을 고리로 삼아 이명박정부 당시에 국가기록원의 대화록이 훼손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전면에 내세워 여권의 ‘참여정부 폐기·삭제공세’에 맞불을 놓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시의회 “강시장 책임져야” vs “단체장 정치 탄압” 민주당

세계수영선수권 ‘공문서 위조’ 지역 정치권 온도차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를 놓고 지역 정치권 및 지역민들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과 지역민 사이에 정부 보증서 위조에 대한 강운태 광주시장의 책임론과 정부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일동은 광주시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과정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연석회의를 열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 낭보에 앞서 밝혀진 정부보증서 위조 논란에 충격과 더불어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광주시장은 시민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유치신청서 제출 당시

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져야하고, 한 점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는 점을 덧붙였을 뿐 강 시장의 책임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추락시킨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강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보증서 위조’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자치 21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강 시장의 무리한 ‘저작 쟁기’가 ‘보증서 위조’로 빚어진 것이라며 강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제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총연합과 생활체육협의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광주시 산하 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유치 직전 ‘보증서 위조’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한 문화관광부 등 정부·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을 져야하고, 한 점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

는 점을 덧붙였을 뿐 강 시장의 책임에 대해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

하지만, 통합진보당과 진보정의당 광주시당은 각각 성명을 내고 국제적인 신인도를 추락시킨 강운태 시장과 광주시의 책임을 지적하고 강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도 ‘보증서 위조’를 놓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참여

자치 21 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강 시장의 무리한 ‘저작 쟁기’가 ‘보증서 위조’로 빚어진 것이라며 강 시장의 사과와 관련자 문제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총연합과 생활체

육협의회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 및 광주시 산하 사회단체 대표들은 23일 유치 직전 ‘보증서 위조’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한 문화관광부 등 정부·여

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m²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 | | | |
|-------|---------------------------|-------|-----------------------------|
| 지상5층 | 501호 내과 502호 치과 | 지상6층 |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
| 지상7층 |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 지상8층 |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
| 지상9층 |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 지상10층 |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
| 지상11층 |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 지상12층 |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항문외과 |

행복한 부자들을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 메디컬 타운

朴대통령, 지방 민생 쟁기기 나섰다

“지방대 성장 거점 육성”… 내달 전남 방문 할 듯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 행기기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주부터 지역 방문 일정이 있다”고 말문을 연 뒤 지방대학 발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발전 정책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해당 자치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를 하는 지역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의 견인차이 성장거점으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방의 문화를 특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지방대학은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강점 분야와 지역별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하고 투자를 집중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며 “우수한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대학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회의 후 박 대통령은 바로 부산으로 향해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 참석한 뒤 부산 북항

반응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싶어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 방문에선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광역단체장으로부터 지역현안을 보고받고, 지역인사들과 구체적 사업을 논의하는 일정을 잡는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지역 SOC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지역공약 추진(이행)계획’, 11일 ‘혁신도시 개발촉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으며 18일에는 지역발전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강기정 의원

광주은행장 선임

4대 원칙 제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22일 민영화를 앞둔 광주은행의 신임 행장 선임을 앞두고 4대 선임 원칙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은행장 선임을 앞두고 ‘밀실인사’·‘낙하산인사’·‘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4대 원칙은 ▲광주은행 사상 최초의 내부 출신 인물

▲지역 환원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인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고 지역민과 조직 내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인물 ▲지역 경제 견인 및 이익의 지역 환원과 같은

지방은행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확고한 경영철학을 가진 인물 등이다.

이석현 투표관리위원회장은 당원들

민주당, 정당공천제 폐지 진통

찬반운동 금지는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 의원은 전날 당원들에게 “정당공천제 폐지는 낡은 정치, 돈 정치, 부패정치의 부활”이라는 내용으로, 진 의원은 “정당공천 금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해한다는 이유로 2003년에 위한 결정을 받았다”며 폐지반대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민주당이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폐지할지를 놓고 이를째 전 당원 투표를 진행중이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인 정당공천 폐지에 대해 여론조성을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반면, 정당공천 폐지가 이뤄질 경우 인지도 등에서 상당한 ‘수혜’를 받게 되는 일부 자치단체장들은 조직을 이용해 정당공천 폐지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공천 폐지를 관찰하기 위해 당원투표를 강행한 당 지도부는 투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반대 입장이 속출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 투표에서 정당공천 폐지가 부결된다면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에 쓰고 있다.

24일까지 전 당원 투표
일부 의원 반대 문자메시지
단체장들은 찬성 여론 몰이

시민단체 대선 공약 지켜라

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당원투표가 지도부 선출이 아닌 당의 노선 등과 관련해 이뤄지는 첫 사례인 점을 강조하며 투표참여율을 끌어올리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는 2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향후 민주당의 선택과 행태를 예의주시하면서 더 이상 촉구 차원이 아닌 강력한 시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염중히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시네마 분양완료

2013년 9월 1일 오픈예정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 | | | |
|---------------|--|------|--|
| 지하2층 ~지하1층 |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 | 지상2층 | PC방 203P 임대가 4억600만원 / 분양가 5억750만원 레스토카페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만원 |
| 지상1층 | 농협지점, 허니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49억9250만원 자산1층 휴대폰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 | 지상2층 | 불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만원 |
| 지상1층 |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 국악 69P 임대 | | |